

“완도, 해양치유·해조류산업 글로벌 거점 육성”

김영록 전남도지사, 완도군 정책비전투어
9대 핵심 비전 제시…미역피해 등 예산 지원

완도를 해양치유와 해조류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전남도의 전략이 공식화됐다. 청정바다와 해조류 산업을 축으로 한 ‘블루푸드·블루헬스·블루카본’ 3대 성장축을 통해 완도를 대한민국 해양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18일 오후 완도문화예술의전당 문화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우철 완도군수,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의준 전남도의원,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군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군 정책비전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완도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환영사에서 “완도는 전복과 해조류의 본고장이자 청정 농수산물 생산지”라며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1단계 예타 통과 등 핵심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에서 완도의 산업적 잠재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완도는 청정바다와 201개 섬, 장보고 대사의 해양 개척 정신이 살아 있는 곳”이라며 “수산업의 탄탄한 기반 위에 블루푸드, 해양치유산업 중심의 블루헬스, 해조류를 기반으로 한 블루카본이라는 3대 엔진으로 완도를 확실히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들이 지켜온 바다와 섬의 가치를 미래 산업으로 연결하면 완도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미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연구원은 완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9대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최초 해조류 블루카본 탄소경제 실현 △메타·AI 기반 스마트 수산양식 허브 조성 △해조류의 식품·의약·소재 산업 고부가가치화 △완도 전복을 중심으로 한 K-Seafood 수출 전진기지 구축 △해양·섬 양인문화·문화관광 르네상스 △안전하고 활력 있는 정주 명품도시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초연결 해양광역교통망 완성 등이다.

김 지사 주재로 진행된 정책현안 토론회에서는 지역민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쏟아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완도군 정책비전 투어’ 행사에서 정책현안에 대한 토론을 주재하고 참석자들의 정책제안 및 건의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다. 특히 최근 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양식 미역 업체 탈락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집중됐다. 현재 완도 전체 미역 양식장의 59%에 해당하는 17만3029줄, 2931여기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삼호 (사) 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군 연합회장은 “이상 해황으로 업체 탈락이

심각해 내년 미역 생산 감소는 물론 전복 먹이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미역 포자 생산 시기가 종료돼 추가 확보가 어려운 만큼, 대체 가능한 다시마 종자 구입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연말까지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에 자연재해 인정을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곰피 종자와 다시마 자재·종자 구입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와 군이 함께 현장 복구와 어가 경영 안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청해진 유적 복고 개축 공사

지원, 활수산물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확대, 완도호 랑가시 홀리 축제 도비 지원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으며, 김 지사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 예산 반영을 약속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광주,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실무협’ 본격 가동

의료·산업·학계·행정 참여…유치전략·협업방안 등 논의
지자체 최초 필요성 제기…인프라·연구·임상 역량 우수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유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결의대회를 연데 이어 지역사회료계와 산업·학계·행정이 참여하는 유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실무협의체는 보건복지부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광주가 보유한 치의학 관련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한 유치 전략을 구체화한다.

회의에는 박원길 광주시치과의사회장, 국민석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훈 조선대학교 치과대학병원장, 이정환 광주보건대학교 교수, 강홍원 ㈜덴바이오 대표 등 의료·산업·학계·행정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석해 유치전략 및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대학과 병원을 통한 연구·인재양성 기반, 기업과 연계한 산업화 가능성, 인공지능(AI)·디지털 인프라 활용 융이성, 광주테크노파크 등 혁신기관과의 협업모델 구성, 국가균형발전 실현 측면의 입지 적합성 등 광주의 유치 강점을 집중 논의하며 지역의 상대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모색했다.

박원길 광주시치과의사회장은 “광주는 2012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며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2개(전남대·조선대)가 위치한 광주는 연구, 임상,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최적의 도시로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도안 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은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실무협의체를 중심



광주시는 최근 지역사회료계와 산업·학계·행정이 참여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유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으로 정기적 전략회의를 열고, 차별화된 유치 논리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대시민 홍보와 여론 형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향후 후보지 평가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정부의 평가 기준에 맞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4일 지역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지역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 기원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정청래 “민생정책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국회서 시도당기획단연석회의…“상향식 공천제도 성공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8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민생정책으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시·도당 지방선거 기획단 연석회의를 열고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한없이 신뢰를 주는 든든한 민주당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5년은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을 청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 이것이 시대정신이었다면 두 번째 시대정신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 시대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일구어내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임하는 당의 임정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민생적이고 가장 민심을 파고드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또한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힘 있는 실력자나 일부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던 지방선거 공천권을 완전히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공천혁명, 선거혁명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상향식 공천제도 실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천하는 과정, 경선하는 과정도 투명해야 되겠지만, 지방선거 기획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천혁명, 선거혁명의 방향에 맞게 프로세스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기획하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 경선도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이번에 실험한다”며 “이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천하는 과정, 경선하는 과정도 투명해야 되겠지만, 지방선거 기획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천혁명, 선거혁명의 방향에 맞게 프로세스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기획하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상향식 공천제도 실험이 성공하려면 공천과 경선 과정도 투명해야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제도를 통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민주당에 속속 찾아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축제 개최 전 안전관리계획
지방정부에 신고…입법예고

내년부터는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10·29 사태인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등 사회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성오 기자

전남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334개 ‘전국 최다’

손두부 만들기 등 추가
관광·문화 연계 강화

전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며 전국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전남도는 최근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손두부 만들기 체험 등 관광·문화자원을 연계한 14개 신규 답례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7개 업체가 제안한 품목이 새로 포함되면서, 전남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총 334개로 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가 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지역 공예품, 체험형 서비스까지 답례품 구성을 다각화해



광양 도선국사마을 ‘손두부 만들기 체험’

왔다. 모든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을 원칙으로, 품질과 지역성, 기부자의 만족도를 함께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답례품 가운데는 목포 ‘플레이파크’ 입장권, 광양 도선국

사마을 ‘손두부 만들기 체험’ 등 지역 관광·문화 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단순 소비형 답례품을 넘어, 기부자가 전남을 방문하고 지역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선택지를 넓혔다는 평가다.

답례품 선정 과정에서는 서류심사와 함께 품질 검증, 가격 적정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전남도는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품목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답례품은 공급계약 절차를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누리집 ‘고향사랑e음’에 순차적으로 등록되며, 일부 품목은 이달 말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산구 삼도 운평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

총 30억 투입…상습 침수·주거 환경 등 인프라 확충

광주 광산구가 오랜 기간 낙후된 삼도 운평마을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총 30억원을 투입하는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삼도 운평마을 새뜰마을사업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해·안전에 취약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광산구는 오는 2029년까지 국·시비를 포함한 총 30억원을 투입해 삼도 운평마을의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배수로 정비와 사면 보강, 위험시설물 철거 등 재해 예방과 마을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상수도 정비, 마을 안길 개선, 공동 분리수거장 설치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보강하기 위한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위생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재래식 화장실과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노후주택의 보일러·창호·벽체 정비 등 집수리 지원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경로당 신축과 주민 교육, 마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추진해 주민 주도의 마을 회복을 도모한다.

임정호 기자 jh4415@